

I. 개 요

1. 일시: 2014. 06. 13(16:30~18:30)

2. 장소: KIEP 9층 회의실

3. 발표자: 김홍구(부산외대 태국어과 교수)

4. 참석자

－ 원내(10인)

오윤아(동남아대양주팀, 팀장)
 강대창(동남아대양주팀, 초청연구원)
 곽성일(동남아대양주팀, 부연구위원)
 정재완(동남아대양주팀, 전문연구원)
 이재호(동남아대양주팀, 전문연구원)
 신민균(동남아대양주팀, 연구원)
 박나리(동남아대양주팀, 연구원)
 김유미(동남아대양주팀, 연구원)
 신민이(동남아대양주팀, 연구원)

－ 원외(3인)

김형중(창원대, 교수)
 홍석준(목포대, 교수)
 권경덕(코트라, 차장)

5. 제목: 태국 정국 혼란의 원인과 전망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2014년 5월 22일에 태국에서 1932년 입헌혁명이 발생한 이후 19번째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, 이번 발표를 통해 쿠데타 발발의 원인, 과정, 향후 전망을 다루고자 함.

- － 19차례의 쿠데타 중 성공한 쿠데타는 12차례이며, 이번 2014년 쿠데타는 2006년 9월 19일 쿠데타 이후 햇수로 8년만에 발생한 것임.

- 탁싌 친나왓(Thaksin Shinawatra)은 1998년 타이락타이당(Thai Rak Thai Party)을 창당한 후 2001년에 선심성 공약을 내걸어 총선에서 압승하고 총리가 되었으며, 4년 임기를 마친 후 2005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음.

- － 태국 정치역사상 4년 임기를 마친 총리는 탁싌이 유일함.

- 탁싌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농민과 서민층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파퓰리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.

- － 부실채권 문제 해결, 농가 부채상환 3년 유예, 농촌마을당 100만 바트(약 3.1만 달러) 지원, 의료보험제도 전국 확대,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이 탁싌이 추진한 파퓰리즘 정책의 예임.

- 파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탁싌은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으며, 이러한 성향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인권탄압, 언론자유 훼손, 시민사회와의 갈등 심화, 사법적 독립기구에 대한 간섭 등임.

- －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대한 불만은 2005년 말부터 표출되기 시작하였고, 탁싌 정권은 중산층, 시민사회, 인텔리계층 등으로부터 급속히 지지를 잃어 정당성이 약화되었음.

- 탁싌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몰락을 재촉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군주제 네트워크와 갈등이 심화된 점임.

- － 태국에는 1980년대 이후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군주제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는 군부, 관계, 재계 등 보수세력 동맹으로 형성되며, 그 정점에 있는 국왕이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고

있음.

- 탁선은 집권 후 군주제 네트워크의 큰 축인 관료체제와 군부를 장악하려고 하였음.

- 탁선은 또한 태국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에 속해있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의심받을 언행도 자주 표출하여 수차례 왕실모독금지법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음.

□ 탁선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부정부패 문제임.

- 그가 저지른 부정부패 유형은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특정기업 특혜, 주가조작, 뇌물수수, 특정 집단을 위한 경제정책 입안 등 다양함.

- 그 중 국민들의 불만을 산 대표적인 사례는 친코퍼레이션(Shin Corporation)을 테마섹에 매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임.

o 탁선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친코퍼레이션의 지분 49.59%를 싱가포르의 테마섹에 매각하여 총 733억 바트(약 22.6억 달러)의 수익을 얻었으나, 합법적인 면세 혜택을 받아 260억 바트(약 8억 달러)에 달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음.

o 주식 매각 사건이 쿠데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.

□ 탁선은 2006년에 쿠데타로 물러난 이후, 2006년 4월 2일에 총선을 실시하여 압승을 거두었으나, 국왕이 4월 25일에 해당 총선이 비정상적이며 비민주적이라고 발언한 이후 5월 8일 헌법재판소가 총선 무효화 판결을 내렸음.

□ 탁선이 쿠데타로 물러난 이후 대법원은 그의 부인이 공공용지를 경매로 매입하는데 탁선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선고했으나, 탁선 부부는 형 집행을 피해 해외로 망명하였음.

□ 쿠데타 후 탁선 전 총리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

자산조사위원회는 탁선 부부의 460억 바트(약 14.2억 달러) 상당 금융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으며, 이후 대법원이 이를 몰수하기로 판결을 내린 바 있음.

□ 2011년에 취임한 잉락 전총리(탁선의 막내동생)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△ 헌법개정 △ 전면적 사면법안의 추진 두 가지로, 모두 탁선의 귀국과 사면을 겨냥한 것임.

- 문제가 된 헌법 개정안은 상원 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하원의원의 직계가족도 상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o 현행 헌법상 상원 의원은 76개 도에서 각 1명씩, 총 76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74명은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음.

- 전면적 사면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정부가 이송된 법안을 재발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, 민주당을 비롯한 반정부 연합세력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음.

o 사면법안 원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을 때 정부가 탁선의 사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져 탁선의 사면을 밀어붙였으며 해당 수정안은 탁선의 사면뿐만 아니라 몰수재산의 환원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□ 반정부세력은 사면법안 문제를 발단으로 잉락 전총리 집권 2년여간의 실정(쌀수매 정책 실패,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불투명성, 부정부패 등)을 근거로 정권 퇴진을 주장하게 되었음.

□ 제1야당인 민주당과 쁘텡이 이끄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(PDRC: People's Democratic Reform Committee)는 새롭게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중립적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여 탁선체제를 제거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음.

- 이에 대해 잉락 전총리는 위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, 악화되고 있는 정국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2월 2일

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음.

- 반정부 시위대의 선거 보이콧 하에 치러진 2014년 2월 2일 태국 조기총선의 투표율은 45.8%로, 2011년 총선시 투표율인 75%에 크게 못 미쳤음.
- 반정부 세력은 총선이 같은 날 일제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헌법 108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3월 21일에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음.
-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7일에 타원 뿔리얀씨 국가안보회의(NSC) 사무총장을 총리실 자문역으로 경질시킨 것은 잉락 전총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잉락 전총리 해임을 발표하였음.
- 잉락 전총리 해임 이후 반정부 진영과 친정부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폭력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태국 군부는 5월 20일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음.
- 계엄령 선포 이틀 후인 5월 22일에 뿌라웃 찬오차 육군사령관은 태국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밝힘으로써 쿠데타를 선언하였음.
- 쿠데타 이후 정국은 포스트 푸미폰 국왕(1927년생) 시기의 정치권 새 판짜기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.
- 현재 군사정권은 ‘국가화해->개혁->총선 실시’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, 2006년 쿠데타 상황에 비추어보면 차기 총선까지는 대략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) 토론 내용

-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일본 기업의 주요 투자 거점이나, 최근 현지 인건비 상승, 정치 불안 심화 등 요인으로 인해 일본 기업이 신규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.
- 탁싨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중령으로 예편한 후 80년대에 컴퓨터 부품 사업을 하다가 휴대폰이 도입된 시기인 90년대에 태국의 이동통신 사업의 독점권을 얻는데 성공하여 재벌이 되었음.
 -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경찰세력은 친탁싨 성향을 나타냄.
- 탁싨은 1994년에 팔랑탐당(Palang Dharma Party)에 입당한 후 외무부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후 1998년에 타이락타이당(Thai Rak Thai Party)을 창당하였고 2001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가 되었음.
 - 전 방콕시장인 째렁씨므엥이 탁싨을 정치에 입문시킴.
- 탁싨의 지지기반은 계층적으로는 도시 빈민과 농민층, 지역적으로는 태국 북부와 동북부 지방임.
 - 특히 북부와 동북부 지방은 선거시 탁싨에게 몰표를 주어 탁싨 ATM이라고도 불림.
- 태국은 방콕시장만 직선제로, 나머지 도지사, 시장 등은 간선제로 선출함.
- 일본 왕실과 태국 왕실은 수백년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태국 국왕의 정치개입에 대해 관여하지 않음.
- 태국은 1932년 입헌혁명 이후 헌법이 18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헌법이 개정되면 19번째 헌법 개정임.

- 2007년 헌법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, 반부패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측면이 있음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, 2011년, 2014년 총선에서 탁원 계열 정당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음.
 -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- 지난 2006년 쿠데타 발생 당시 총선까지 걸린 기간을 고려하면 차기 정권 출범은 내년 중후반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 - 2006년 쿠데타 이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.
 - o '2006년 9월 쿠데타->2006년 10월 과도총리 임명->2007년 8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->2007년 12월 총선'
-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.
 - 일례로 민주당은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캄보디아와 프레이 비히어 사원을 두고 영토분쟁을 벌인 바 있음.
- 태국은 아직까지 왕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크고 권한이 막강한 바, 현 푸미폰 국왕의 왕위를 누가 계승할지 큰 주목을 받고 있음.
 - 푸미폰 국왕의 1남 3녀 중 장남(Maha Vajiralongkorn)과 둘째 공주(Princess Maha Chakri Sirindhorn)가 왕위 계승 자격을 갖추고 있음.
 - 1924년 왕실법은 남성 후계자만을 인정하였으나 1974년 헌법에서 여성도 왕위계승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.
 - 왕자는 친탁원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왕위를 이을 자질이 부족하

다는 평가를 받으며, 둘째 공주는 엘로셔츠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음.